

## 20대 국회의원 선거 디딤돌 후보자

### ■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 디딤돌 후보자

1.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2.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 ■ 사회적 약자 배려 디딤돌 후보자

3.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4.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 ■ 정치적 소신·사회통합 디딤돌 후보자

5.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6. 진 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7.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 ■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 디딤돌 후보자

### 1.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

: 일감몰아주기 규정 강화, 소수주주권 보호 등 재벌개혁 노력

#### \*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부거래 제재 강화

- 현행법은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과 그것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점까지를 입증해야함.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도 규정하여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함.

#### \*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이사·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적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와 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 함.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규정은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거래비율로 간주한 비율(30%)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

칙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함. 이에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 전체에 해당하는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감몰아주기의 사후 제재함.

**\* 투명·책임 경영 확립을 위한 경영승계 및 사외이사 요건 강화**

- 재벌의 승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를 통해 금융업의 투명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고 하였음.

**\* 소수주주권 보호**

- 사외이사선임, M&A 등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이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요청과 관계없이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함.

**\* 기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 위원회'와 함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보상 촉구.
- 농협금융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 소상공인연합회와 '상가관리금 상담센터'를 설치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해외 직판)용 쇼핑몰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다수 피해자가 발행한 금융분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금융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임원보수 공개대상을 '5억 이상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마트의 장안동 물류센터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이마트측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물류센터 건립 추진 중단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신세계 이마트는 물류터미널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결정.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 2.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을)

### \*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 더불어민주당 내 갑의 횡포를 타파하기 위해 구성된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등 법안 55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 2015년 12월 현재 총 14건의 법률을 통과 시키는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 특히 비정규직, 대리점주 등 분야에 상관없이 을(乙)을 입법활동을 펼침.
- 남양유업사태 해결, 본죽·배상면주가·매일유업·CU 편의점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 타결 및 불공정행위 해결, 중소기업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분쟁 조정, 대기업 기술편취 분쟁 해결, C&M 케이블방송·KT·LG U+·태광티브로드·삼성전자서비스 등의 간접고용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부당해고 복직 등 실질적 문제 해결 및 조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함.

### \*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 2015년 국감에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실태 분석결과 공공기관에서 용역 근로자를 상대로 시중노임 단가를 지급하는 곳은 6%뿐이라 밝혀냄. 다른 상임위 의원과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국정감사 실시 결과 각 부처의 장관 및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정과 정부 지침 준수를 통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또한,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청렴 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해당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함.

### \* 지역상권 상생발전

-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생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함.

## ■ 사회적 약자 배려 디딤돌 후보자

## 3.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덕양구 갑)

### \*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마련

-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남녀의 성별 및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 됨.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고용형태나 인종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층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값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최저임금이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제한**

-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단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매우 어려워 그 규모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어 옴. 이에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사유를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기존 기간제법에는 사용자가 정규직을 채용할 시 해당 사업장이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노력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회분위기에도 사회생활 속에서 여성성에 대한 보호방안은 미미한 수준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자체를 포기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승급·휴가 등의 차별을 금지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함.

**4.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확산저지 노력

**\*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저지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노력**

-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법안임.

**\* 파견노동자 보호 노력**

- 파견법 일부개정안은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무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의 파견사업은 금지토록 하며,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강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흐름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 설정을 통한 노조활성화**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조합규모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 정치적 소신 디딤돌 후보자

### 5.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 \* '국회법 개정안' 정치적 소신

-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파문이 커짐. 급기야 7월 8일 유승민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함.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판단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음. 위법적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임.

#### \* 정치적 소신 발언

-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상식이고 유신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 본인(박근혜 비대위원장) 생각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리해야 한다."(18대 대선 전인 2012년 9월 대구 지역 언론인 토론회에서)
- "대통령의 1호 인사(대통령직인수위 첫 인사)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을 보고 입을 닫았다"(2013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이의 영남권 사투리)들이 하는 겁니까."(2014년 7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방문 기간 발언자료로 사전에 배포됐다 취소된 '중국 경도론' 내용을 비판하고, 정권에 상관없는 일관된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촉구하며)
- "박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정책과 인사, 소통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2015년 1월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앞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무엇이 민심인지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찹쌀떡같은 공조 이루겠다. 대신 우리 대통령, 청와대 식구들 장관들도 더 민심에 귀 기울이고 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임기 끝나는 날까지 혼신의 힘 다해 사심없이 모든 측면에서 열심히 잘 하겠다." (2015년 2월 당 원내대표 당선 인사에서)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가진 자가 더 세금을 낸다는 원칙 아래 단계적 증세 방안을 여야가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 (2014/12/29, 국회 토론회)
-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 원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2015년 4월 국

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 정책지향 : ‘따뜻한 보수’(2015년 4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 세월호(통합과 치유) : 세월호 온전한 인양 및 인양비용 지원. 세월호 정치적 악용 벗어나 통합과 치유로 나아가야 할 것.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 시작
- 양극화 해소 : 새누리당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할 것. ▲단기 부양책 금지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 ▲여성 경력단절 등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이공계 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대기업의 하청 단가 인상 등 요구

## 6.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 공약 파기한 「기초연금법제정」 반대하고 장관직 사퇴**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2013년 9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 양극화 완화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 소득 불균형과 계층간 양극화 심화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시혜성 복지정책 외에 취약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 마련

**\*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단가인하에도 적용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

## 7.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 정부 여당(한나라당) 의원시절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 심각성 지적**

- 2009년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12년 정도에는 302조에 달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공기업의 부채는 들어가지 않음.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10개의 사업성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너무나 많은 부채가 발생할 소지를 발견. 2007년 말에는 120조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302조로 무려 180조나 증가하게 됨. 잘못된 경우에는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빚으로 될 수 있음. 세종시 경우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짐을 맡겼고, 4대강사업 또한 수자원공사에 짐을 맡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맡기면서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공기업의 부채나 정부의 보증채무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그림자재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009.11.25 이데일리 인터뷰중에서)

**\* 합리적 경제통**

- 18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을 이끌었고, 2009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과도한 감세는 재정 건전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며 감세유보 법안을 내놓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반대표를 던지고, 경쟁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함.

**\* 18대 국회의원 당시 성실한 의정활동**

- 3년 연속 경실련 우수 국감 의원 선정. 경제현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수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기획재정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음. 18대 본회의 개근의원. 동료의원 과 보좌관이 뽑은 우수의원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함.